



6월 이후부터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전월세를 지원하고, 낡은 집은 고쳐드립니다.”



Housing Benefit

지원대상 중위소득 43%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지원내용 임차가구 | 자가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료 지원 | 주택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신청방법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가구원, 친척 등 신청)

시행시기 7월부터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콜센터 129) | 홈페이지 www.hb.go.kr

데!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CONTENTS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5 05+06 vol.44



발행일 2015년 6월 15일 (격월간, 비매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이성보 **편집인** 임윤주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전화 044,200,7075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이팝 02,514,7567 www.eepop.co.kr



Special Theme

- 04 **스페셜 1**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 개최
- 08 **스페셜 1-1** 민간 기업도 동참, '투명사회 추진동력' 끌어올린다
- 10 **스페셜 2** 국민권익 증진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12 **연중기획** 권익위와 함께 간다 희망의 내일을 키워가는 노부부 이야기



소통 공감

- 14 **현장 24시** 국민 고충 헤아리는 열린 창구 언제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18 **글로벌 ACRC** 부패 없는 세계를 위한 지식 공유의 장이 열린다
- 22 **권익위가 간다** 국민의 권익에 한 발 더 가까이 _행정심판 제도 다시 보기
- 26 **이슈 포커스** 국가 재정 지키는 파수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28 **국민권익 Q&A** 국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국민권익 지킴이입니다!
- 30 **핫 민원 키워드** 정부 민원상담, 이제 110번만 기억하세요!
- 32 **행복 공감** 약취와의 전쟁,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하는 것이 최선!



행복 나눔

- 36 **청렴 토크** 영국의 뇌물방지법, 권익위의 청탁금지법과 함께 청렴한 세상으로
- 40 **일상생활 개념노트** 스마트폰 앱으로 더 스마트해진 일상
- 42 **문화 레시피** 때 이른 무더위 속 문화 순례를 떠나다
- 44 **똑똑! 생활법률** 믿고 인터넷 소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46 **꼭 알아두세요!**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으로~
- 48 **ACRC News**
- 50 **독자 옴부즈만**

클.
윤진아 기자

사진.
정준택(fun studio)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에 권익위는 5월 28일 포스트타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법의 세부 집행 기준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관련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 개최

‘Brand New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

권익위는 5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첫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를 위한 첫 단추로서 ▲예외적 허용 금품의 금액 기준 ▲외부강의 사례금 기준의 직 종별 차등 적용 여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방지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성보 권익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하여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 중요한 과제는 법률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당초 입법 취지를 살려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권익위는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여 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도 “기존의 뇌물죄와 달리 청탁금지법은 청탁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때문에 기존 법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진화된 부패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시행령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하였다.

토론회는 제1세션과 제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부정청탁 쟁점 및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 제2세션은 ‘금품수수 관련 합리적 기준 설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광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탁 행위 요건 및 예외 사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 지가 부정청탁 행위 근절과 건전한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열쇠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국회의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제3호)’에 대해 개인의 사적 이익과 관련된 특혜를 목적으로 하거나, 고충민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벗어나 해결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는 등 엄격한 예외 사유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경희대 행정법 교수는 선출직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청탁을 신고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청탁의 행위 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법령의 범위를 개별 법령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일반 법원칙 및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의 부패 구조와 연고주의 관행을 깨는 혁신적인 제도”라면서 “‘법령 위반’, ‘사회상규’ 등 부정청탁 금지 요건 및 예외 사유의 해석은 기존의 판례 및 향후 법원 판결 등



▶ 이정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을 통해 충분히 형성되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천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정청탁의 행위 요건인 ‘법령을 위반하여’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현행 법률은 언론 분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포함하기 곤란하므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리적인 금액 기준 마련 필요

제2세션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 금액 기준 설정 방안에 대해 공직자와 공적 업무 종사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적용 대상의 범위 확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금액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금품수수 관련 입법 방향 제안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김학원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노재성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팀장 및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법률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금액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원 이사는 더불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원섭 실장은 법 제정 목적이 적발·처벌이 아닌 예방인 점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금액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음식물의 경우 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건식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언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책임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되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금액 기준은 음식물의 경우 5~7만원, 경조사비의 경우 10만 원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성기 성신여대 형법 교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기준에 대해 직종별로 차등 없이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수준보다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사는 물가상승률 등 현실적인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의 금액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교원의 외부강의는 사회구성원 교육을 위한 활동의 연장선상인 만큼 공직자와 차등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법률의 약칭은 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김영란 전 권익위 위원장도 언론에서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다 보니, 법 명칭에 법의 취지와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안타까워하신 바 있다”고 전했다.

”

‘김영란법’ 아닌 ‘청탁금지법’으로

한편 이날 이정보 위원장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법률의 약칭을 ‘청탁금지법’으로 불리울 것을 피력했다. 이 정보 위원장은 “법률의 약칭은 법이 지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함축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김영란 전 권익위 위원장도 언론에서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리다 보니, 법 명칭에 법의 취지와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안타까워하신 바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이 법을 ‘청탁금지법’으로 불려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권익위는 이번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 및 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8월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청탁금지법. 바로 이 법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 일류 국가로 향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날 토론회가 참가자들이 보여주었듯 대한민국 국민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로 제정된 법인만큼, 청탁금지법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의 단초가 되길 기대해본다.

클.
윤진아 기자

사진.
편집실

민간 기업도 동참 ‘투명사회 추진동력’ 끌어올린다

민간 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소개

권익위는 4월 24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금 대한민국 기업 안팎에서 퍼져 나가고 있는 새로운 변화는 반부패·공정·투명문화로 요약된다. 기업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원칙을 지켜야 기업도 대한민국도 올곧게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투명사회 구축’에 모두가 하나 되어 나선 참이다.

민간 기업 대상 청탁금지법 의견 교환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업호감지수는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윤리경영 미흡(57%)’이 가장 많았다. 이것이 권익위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소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데 속도를 높인 이유다.

권익위는 4월 24일 민간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을 정부세종청사로 초청해, ‘2015년 상반기 청렴정책 전수과정’을 운영했다. 대한민국 반부패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있는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민간 기업의 협조를 청하는 자리였다. 지난 2월 1,300여 공공기관에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 지침을 전달한 데 이어, 향후에도 기업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도로 청렴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19개 기업 윤리경영 담당 임직원 30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다. ‘청렴정책 전수과정’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과 제도 운용 경험을 민간 부문과 공유하기 위해 2013년부터 권익위가 실시하고 있는 기업 윤리경영 교육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청탁금지법이 제

정됨에 따라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과의 업무 협력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 내용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정부와 기업, 반부패 공조 확대

민간 기업 대상 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 ▲적용 대상 ▲부정청탁 유형 및 예외 사유 등이었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한 권익위는 향후 부패 방지 정책 수립에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 및 진단 방법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공직 사회에서 우수한 제도로 평가되는 ‘클린 카드’ 제도와 ‘공무 마이리지’ 관리 등도 함께 소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의 제정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우리 사회의 청렴 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청렴성이 향상될 수 있리라 기대한다”며 민간 기업 경영진 및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기업인 의식 개혁 등

청렴문화 확산 중점 추진

최근 정국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부터 법조계 전관예우 파문까지, 부정부패 사건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며,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있다. 지속적인 부패 척결 구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부패 지수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부패를 관행으로 치부하는 일부 기업인과 정치권의 비뚤어진 인식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도성장 가운데 윤리 문제를 소홀히 여긴 결과로, 부정부패가 있더라도



성장만 하면 된다는 ‘성장제일주의’, 기업도 이익만 내면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이익우선주의’가 빚은 부끄러운 단면이다. 부패 고리를 끊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정치권력과 기업인의 정경 유착’이 지목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는 한국에 대한 대외 신뢰도는 물론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의 글로벌 진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성보 위원장은 6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윤경SM포럼에서도 민간 기업 CEO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청렴한 사회를 위한 동행, 청탁금지법과 윤리경영’을 주제로 청렴 특강을 이어갔다. 이에 더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반부패 정책을 발전시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권익위는 올 한 해도 기업 안팎에서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시킬 여러 정책들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변화의 방향을 미리 재단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함께 새 지도를 만들어 나갈 청렴한 기업들로 인해 ‘한결 살맛나는 세상’이 만들어지리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클.
윤진아 기자

사진.
편집실

국민권익 증진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정부3.0 체험마당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 고충의 해결사를 자처하며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권익위의 변치 않는 신념이다. 4월 30일 44개 중앙행정 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정부3.0 체험마당에서도 권익위는 ‘참으로 권익위다운 소통의 판’을 벌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또렷이 듣고 왔다.



정부3.0 체험마당을 통해 국민과 소통

권익위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나흘 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정부3.0 체험마당’에 참여해, 국민과 한층 가까운 소통에 나섰다.

‘정부3.0’이란 공공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협력함으로써 대국민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운영 전략을 일컫는다. 정부3.0 추진 3년째를 맞아 테마별로 펼쳐진 이번 체험마당은 딱딱하고 형식적이었던 기존의 정부 주관 행사에서 탈피해, ‘테마파크형 전시회’라는 주제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꾸며졌다.

권익위는 이번 체험마당에서 정부3.0 우수 정책인 ‘민원확산 조기경보제’와 ‘이동신문고’ 등 2개의 전시관을 열어 국민이 민원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민원확산 조기경보제, 이동신문고 “아하, 이런 거였어?!”

박람회 첫날, ‘민원확산 조기경보’ 전시관을 찾은 청소년들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접수·처리되는 170만 건 가량 민원 중 일정 기간 비슷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사전 경보를 발령, 관련 기관이 초기에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을 직접 체험토록 한 공간이었다.

특히 이 민원정보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급증하는 민원 단어와 발생 지역을 도식화된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민원 단어를 직접 입력하면, 시간에 따른 특정 민원의 확산 정도와 민원 단어 간의 상관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었다.

‘이동신문고’ 전시관에서는 권익위 이동신문고팀이 직접 상주, 방문객들이 평소 생활에서 겪었던 고충과 애로를 현장에서 상담하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직접 체험토록 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 서비스’는 민원 상담 중 민원을 바로 해결하거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각종 행정 관련 궁금증에 대해 현장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는 서비스다. 또 이러한 민원상담 외에도 행정심판과 공공 분야 예산 낭비 및 각종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익 침해 신고 접수도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



▶ 민원 빅데이터 검색 시연을 하는 김인수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권익위 특별조사팀 박문수 팀장은 “이동신문고는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가 국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고자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에서도 체험 공간을 찾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상담을 시행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체험마당 행사는 끝났지만, 권익위의 이동신문고는 일선 현장 곳곳에 건재하니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귀띔했다.

권익위가 안내하는 ‘한수 위’ 소통과 참여

권익위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주요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유능한 정부, 스마트 오피스’ 전시관에서 PC를 이용한 ‘영상민원 서비스’를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PC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는 지난해 말 권익위가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제공하게 된 서비스다.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면, 영상을 통해 세종청사에 있는 민원 조사관에게 고충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와 사명에 부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국민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국민들이 가진 저마다의 열정이 성숙한 사회의 아이디어가 되고, 끊임없이 샘솟는 이야기 가 되어 소통의 물꼬를 원활히 터줄 것이라 감히 짐작해본다.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

희망의 내일을 키워가는 **노부부 이야기**

주변을 조금만 주의 깊게 둘러보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권익위의 이동신문고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도움이 절실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전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그곳에서 얻은 긍정적 에너지로 또 다른 나눔을 실천하는 순환 고리를 이루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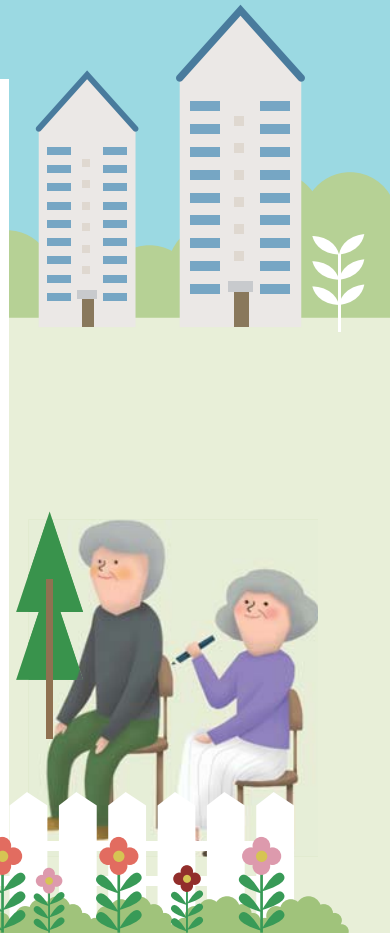
이번 호 〈국민권익〉에서도 〈독자와 함께하는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한 노부부에게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치매와 파킨슨병 등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는 여든 둘 할아버지의 사연이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 이분께 소정의 지원금과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진짜 감동한 부분은 관심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걱정을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든든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권익위는 이러한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이웃에게 이러한 희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세요. 〈국민권익〉을 읽으신 후 〈국민권익〉 편집실로 엽서를 보내주시면, 엽서의 숫자만큼 금액을 적립해 이를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꾸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권익위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더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불편한 아내를 돌보고 있는 여든 둘 할아버지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힘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2014년은 매우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바로 제 아내에게 치매와 파킨슨병, 요실금이 한번에 몰아쳐 찾아왔기 때문이었죠. 그 바람에 우리 부부의 생활은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저희 부부는 요양원과 병원을 오가다 지금은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아직 건강한 편이라 손수 아내를 돌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힘에 부치기는 합니다. 빠듯한 살림에 경제적인 부분도 힘겹고요. 출가한 자식들도 어렵기는 매한가지라 부모 된 입장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 등교길 교통정리나 반찬 배달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병원비를 조금이나마 벌고 있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헤아려 얼마 전 권익위의 이동신문고에서 생활비를 지원해주셨습니다. 이동신문고를 통한 20만 원과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만 원을 더한 귀한 금액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에서 고추장, 참치, 식용유, 생선 등 먹을 거리와 물티슈 등 생필품까지 넉넉히 지원해주셨습니다.

요즘 아내는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끓여주는 누룽지만 겨우 먹는 정도지요. 어서 회복해서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쉽지 않겠지만 저는 희망을 갖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신 분들을 위한 보답이라는 생각에서요. 소중한 그 마음들을 생각하며 아내의 회복을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ACRC

소통 공감

- | | |
|------------------------|--------------------------------------|
| 14 현장 24시 | 국민 고충 헤아리는 열린 창구
언제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 18 글로벌 ACRC | 부패 없는 세계를 위한 지식 공유의 장이 열리다 |
| 22 권익위가 간다 | 국민의 권익에 한발 더 가까이
_ 행정심판 제도 다시 보기 |
| 26 이슈 포커스 | 국가 재정 지키는 파수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 28 국민권익 Q&A | 국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국민권익 지킴이입니다! |
| 30 한민원 키워드 | 정부 민원상담, 이제 110번만 기억하세요! |
| 32 행복 공감 | 악취와의 전쟁,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하는 것이 최선! |



▶ 국민권익위원회의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종합민원상담센터 전경

국민 고충 헤아리는 열린 창구 언제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종합민원상담센터

살다 보면 혼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맞닥뜨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당장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부터 막막하기 일쑤. 설령 방법을 찾는다 해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에는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러한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권익위는 서울과 세종에서 종합민원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게다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든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9개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상시 대기하고 있다.



▶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민원인이 민원 접수 안내를 받고 있다.

거리적 불편 해결 위해 화상상담 전격 실시

일반적인 고충 및 생활 관련 민원 상담은 기본이고, 행정 기관 등의 각종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상담도 함께하고 있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 저마다의 어려움을 안고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 줬었다. 현재 상담은 서울과 세종 두 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일의 비중이 세종으로 옮겨가다 보니 거리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516건의 화상상담이 이뤄졌는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민원인이 준비한 서류를 상세히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는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부분. 서울과 세종의 거리를 넘나들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강화됐음은 물론, 상담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흥분과 고성 등도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출장비 등 비용 절감의 효과도 있다.

전문가 상담 서비스 분야도 9개로 확대

한편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대부분의 민원인은 온라인으로 민원을 제기하기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이거나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층이다. 때문에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 문제 등에 관해 전문가 상담을 받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에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가 이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창구가 되고 있다. 상담의 폭을 보다 전문적인 영역까지 넓히기 위해 상담 조사관 및 방문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 기존에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법무사·사회복지사 5개 분야에서 지난 4월 6일부터는 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손해사정사까지 추가로 확장했다. 덕분에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과 다른 기관을 제차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추가로 확대된 4개 분야는 수요가 많지는 않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돼 신설된 터라 아직까지 이용률이 높지는 않다. 때문에 비효율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는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전화로 상담하는 형태로 시범 운영 중이다. 권익위는 이용 추이를 살펴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민원인의 상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9개 분야에 대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직접 대면 혹은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전문 상담위원은 요일별로 고정되어 운영되는데, 향후 스케줄을 서울·세종 상담센터 간 교차로 편성하고, 화상상담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다.

민원인 만족도 제고 위해 교육 강화

2014년 상담 만족도가 전년 79.9%에 대비해 3% 하락한 76.9%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상담 민원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결과, 경청 태도·내용 파악·자세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친절 교육의 수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내부 콜센터 강사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하는 정도였다면, 앞으로는 외부 교육 기관에 의뢰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연 2회의 친절 교육 외에 감사실에서 만족도 결과를 발표하면, 평가 결과에 대해 다시 한 번 피드백을 거처려고 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오는 10월 중에는 방문 민원인 200명을 대상으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 결과를 분석한 후, 내년 상담센터 운영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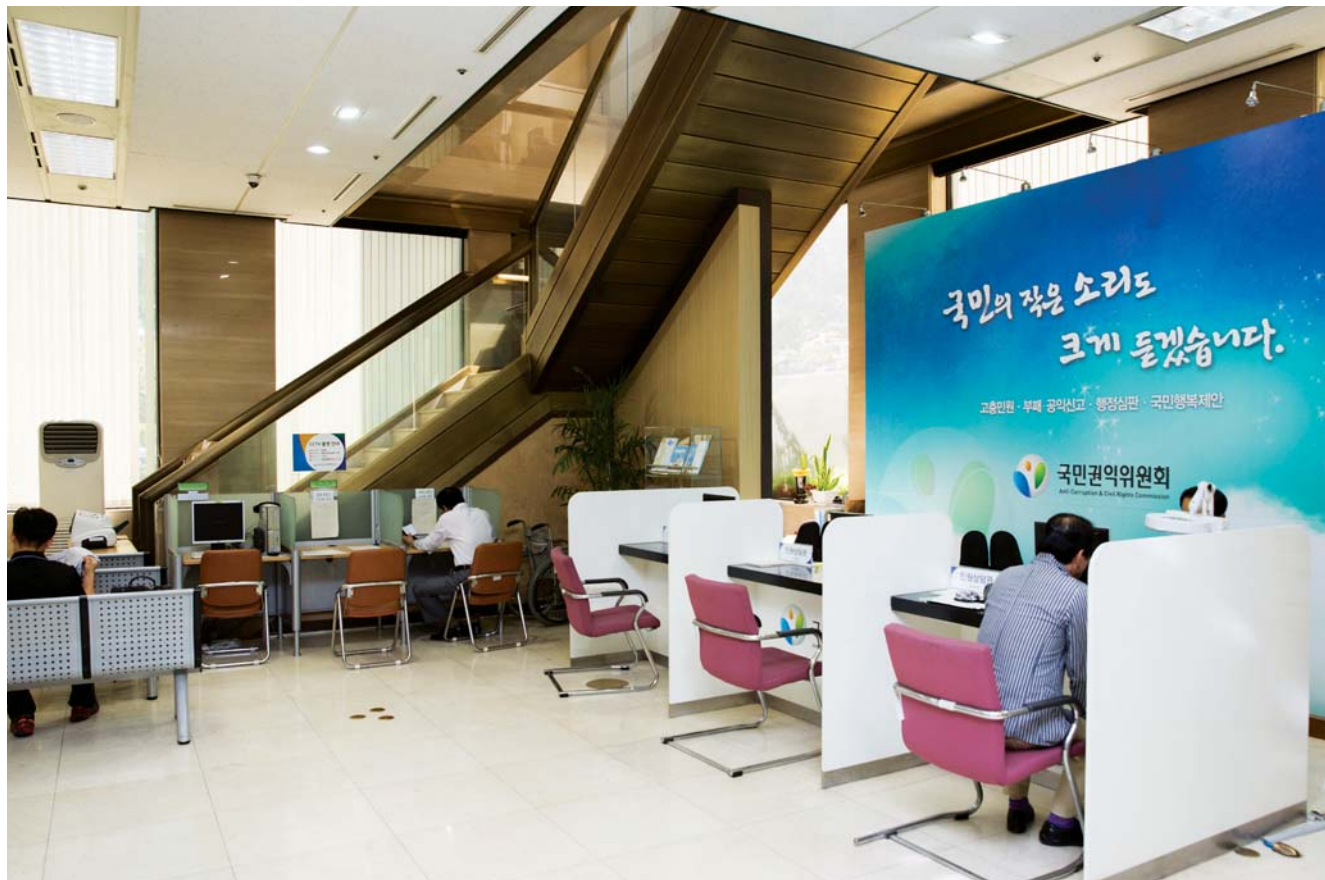
부패·공익 신고 심사 및 대비실 서신 민원 관리 역시 달라진다. 조달청, 감사교육원 등 계약·회계 관련 교육 과정에 조사관을 연 1회 이상 참여시켜 점점 전문적으로 진화되는 신고 사건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다소 수동적인 접수 방법을 개선, 모든 신고 건에 대해 상담 통화를 실시하고, 개연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를 강화할 방침이다.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안내과 유정현 사무관은 “앞으로 상담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민원인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종합민원상담센터가 민원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국민소통 창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기준에 변호사·세무사·공인노무사·법무사·사회복지사 5개 분야에서 지난 4월 6일부터는 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손해사정사까지 추가로 확장했다.

”



MINI INTERVIEW

“민원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것,
바로 공감이 최우선이죠!”

전대길 상담위원

종합민원상담센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얼굴, 전대길 상담위원이다. 공직자로 근무하다 퇴직 후 사회봉사의 개념으로 종합민원상담센터에서 2년째 근무 중이다. 그는 이곳에서 민원인들이 어떤 문제로 방문했는지 면밀히 파악한 후, 적합한 상담원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소, 전화번호, 상담 내용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그걸 저에게 제출하면 분야에 따라 상담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죠. 제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직접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오랜 세월 지자체에 공직 생활을 하며 지식과 노하우를 쌓은 덕에 웬만한 내용은 그가 즉석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니 민원인들의 수고로움까지 한층 덜어주는 셈이다. 뿐만 아니다. 별도로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는데, 그래서인지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능력 또한 수준급이다.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한 마음에 화부터 내고 보는 민원인들을 만나 진땀을 빼는 일도 부지기수지만, 그는 말한다. 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화를 진정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본인의 역할이라고. “민원인들은 해결 방법이 없으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거예요. 그러니 답답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죠. 본격적인 전문 상담에 앞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민원 해결의 효율도 높아질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과가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원인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저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부패 없는 세계를 위한 지식 공유의 장이 열린다

외국인 청렴 교육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역량 강화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제 사회로부터 반부패 기술 지원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인정받은 바, 그 중에서도 권익위가 지난 2013년 개설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청렴 교육은 훌륭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15개국 15명의 연수생, 청렴 교육 참여

지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간의 일정으로 ‘외국인 청렴 교육’이 진행됐다. 연수 에 앞서 세계 각국 반부패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기관별 최대 3명까지 연수 참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관련 업무 경력과 영어 능력을 기준으로 최대 15명의 합격 자를 선발했다.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 듯, 24개국 47명의 공무원이 지원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외국인 수료자들에게 환송사를 하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올해는 아시아에서 6명, 아프리카, 중 동 · CIS(독립국가연합), 기타 지역에서 각각 3명을 선발함으로써 베트남, 폴란드, 우크라이나, 모로코, 파라과이 등 15개국 반부패 기구 직원 1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외국인 청렴 교육은 올해로 세 번째. 권익위는 반부패 기술 지원 분야에서의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자, 지난 2013년부 터 세계 각국의 반부패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 로 청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물론 권익위의 외국인 청렴 교육과정 개설 이전에도 비슷한 해외 사례는 있었다. 국제기구인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IACA)와 말레이시아 부패방지 위원회 산하 말레이시아 반부패 아카데미(MACA)에 국제 반부패 교육과정이 개설돼 정기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었다. 또한 홍콩,



▶ 제3차 외국인 청렴 교육과정 수료식 (2015. 5. 20) 기념촬영 모습

호주, 싱가포르 등에도 현지 대학과 연계한 단기 반부패 연수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 과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체로 부패 현상에 관한 이론 위주의 강의 혹은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기법 훈련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권익위를 중심으로 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 평가, 부패영향 평가, 청렴 교육 등 다양한 제도가 발달되어 있어 부패 수사와 같은 사후 통제 기법보다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 개발과 이행에 특화되어 있다.

청렴도 측정, 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 정책 · 실무 교육

권익위에서는 교육의 효율성과 연수생들의 만족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연수 참가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다음 해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 평가, 신고자 보호, 청렴 교육, 부패 조사 등 교육 수요가 높은 과목들을 구성해 운영했다. 또한 국내 외에서 호평을 받은 ‘청렴 콘서트’ 등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과 이해충돌 방지 등 공직자의 윤리 강화와 관련된 강의를 확대 실시했다.

‘청렴 콘서트’란 연수 · 판소리 · 연극 등 다양한 요소를 접목한 새로운 양식의 반부패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번 청렴 교육의 경우 어느 나라에서나 흔히 접하는 인사 관련 부정청탁을 주제로 상황을 극을 만들어 연수생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 호평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연수생들이 한국을 처음 방문하고 한국이란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배경지식이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해, 청렴 교육 외에 문화 체험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연수 과정 가운데, 한국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폭넓은 시각에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문화 · 역사 · 사회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간단한 한국말 표현을 배우고, 주말에는 청와대 사랑방 · 경복궁 · 인사동 · 서울타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07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 평가 등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전수를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 태국 · 베트남 · 몽골 등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초청 연수, 현지 컨설팅 등 반부패 기술 지원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반부패 기술 지원은 2008년 우리 정부가 비준한 ‘UN 반부패협약’, 2010년 서울에서 채택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 등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우리 반부패 정책의 외국 전수 사례 및 제도의 도입 효과는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으며, 특히 청렴도 측정은 2012년 유엔공공행정상(UNPSA) 부패방지 분야 대상을 수상했



▶ 외국인 청렴 교육에 참여한 각국의 공무원들이 반부패 정책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다.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역시 UN, OECD, APEC 등이 주관하는 국제 회의에서 수차례 소개되는 등 국제 사회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왔다.

지난해 대비 교육 만족도 큰 폭 상승

이번 교육에 참여한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수 과정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평균 91.0점으로 지난해 85.5점에 대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11개 설문 문항별 점수 분포를 보면 최저 85.7점부터 최대 94.3점까지 전반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았으며, ‘연수 과정을 동료들에게 추천하겠다(94.3점)’, ‘담당 업무와의 관련성(94.3점)’, ‘권익위 직원의 지원(92.9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연수생 중 다수가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 평가, 신고자 보호 보상, 청렴 교육 제도 등을 자국에 도입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만족도가 상승한 것은 청렴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교육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강의를 확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로 총 3회의 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권익위는 더욱 우수한 교육 콘텐츠 구성에 대한 모색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연수생의 교육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강의 위주로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 우선시 될 계획이다. 또한 내년 교육에서는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이 오가는 참여형 학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제도를 개도국에 실제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권익위 직원의 실무 경험과 사례 소개 내용을 더욱 보완해 강의의 현장감을 높이려 한다. 지난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 관련 강의도 개설 예정에 있다.

세계 각국 반부패 분야의 인적 · 제도적 역량을 개선 및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반부패 담당자들 간 네트워크 형성과 화합의 장을 열어주는 외국인 청렴 교육과정. 더 나아가 우리나라 반부패 제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권익위는 반부패 기술 지원 분야에서의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자, 지난 2013년부터 세계 각국의 반부패 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 권익에 한 발 더 가까이

행정심판제도 다시 보기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았을 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행정심판 제도가 올해로 시행 30주년을 맞이했다. 국민권의 보호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보완과 발전을 거듭해온 지난날, 그 역사를 토대로 단단히 뿌리내린 행정심판 제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보완 및 발전을 거듭해온 행정심판 제도

국민의 권리를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은 경우,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도, 개인이 나서기에는 방법도 과정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행정심판 제도다.

행정심판은 간단히 말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넓게는 행정 기관에 의한 모든 심판 절차를 뜻하는데,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판을 한다는 점에서 행정 소송과는 다르다. 또한 행정 소송에 비해 빠른 분쟁 해결이 가능하고,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 1984년 소원법 폐지와 함께 행정심판법을 제정한 것을 기점으로 행정심판 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 제도로서 발전을 거듭해왔다. 현재까지 개정을 거친 것이 총 일곱 차례. 특히 1995년의 개정은 내용적 변화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일어나, 권익구제 제도로서의 기능을 높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 후 1997년과 1998년의 추가 개정은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2008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정부 조직을 축소 조정하면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합한 국민권익위원회를 새롭게 설치, 행정심판의 신속한 권리 구제 기능 강화 내용을 포함한 행정심판법(법률 제8871호)을 공포했다.

2010년에는 전부 개정으로 임시 처분, 이의 신청,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제도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어 2012년과 2014년 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와 공무원 조직체계 조정에 따른 변경으로, 2010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전개

더욱이 올해부터는 15개 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 허브 시스템 2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개시해 운영 중이다. 행정심판 허브 시스템이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진행 상황 및 행정심판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인 '권리누리(<http://www.simpan.go.kr>)'에 접속하면 원하는 대로 즉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행정심판 청구 사례 7백 건, 재결 사례 1천 건이 공개되어 있어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구축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데, 2014년 6개 위원회를 시작으로 오는 2016년에는 약 20개 위원회에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이러한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보급 · 확대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심판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역시 크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권리구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국민의 권리를 위법 혹은 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은 경우,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봐도, 개인이 나서기에는 방법도 과정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행정심판 제도다.

”

간 영상으로 구술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행정심판 관련 민원인 대상 화상상담응으로 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대전과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실시된 ‘찾아가는 행정심판’도 주목할 만하다. 신청한 청구인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구술하러 오기 어려운 타 지역민과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이에 올해에는 행정심판 청구 건의 50% 이상이 집중된 수도권에서 매월 2회씩 순회 심판을 실시하고, 강원권, 영남권, 전라권 등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 추진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로 적극적인 대처

권익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를 실현하고자 지역순회 심판, 찾아가는 제도 설명회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확대하려 한다. 특히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국방·보훈, 학교폭력, 산업재해 등 국민안전 분야를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과 차관회의 공동 상정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공동 상정이 어려울 경우 행정심판법의 고유한 개정 사항에 대해 독자적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

현재 행정소송법에는 당사자 소송이 도입되어 있으나, 행정심판법은 항고 심판만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 종류의 다양화가 요구되는 상황. 이에 당사자 심판 등을 도입해 권리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 지난해 ‘국제 행정심판 심포지엄’을 개최해 행정심판 국제 교류의 단초를 마련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행정심판 제도의 수출 여건을 조성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간 이용률 편차 해소를 위해, 식품위생·문화관광 관련 사건 가이드라인 보급 및 시·도 위원과의 정책 간담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계획을 보다 성공적으로 실현하고자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하는 노력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010년 79.3일이었던 처리 기간이 2014년 68.6일로 짧아졌고, 150일 이상 장기 미결 사건 역시 2013년 172건에서 2014년 91건으로 줄어드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행정심판 제도의 인지도는 지난해 기준 44.4%로 다소 낮은 편이다. 지난 2010년 39.1%이었던데 반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행정심판법 시행 30주년.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토대로 다양한 방법을 개발,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2015년 행정심판 분야 주요 사업

세부 과제명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권익구제 향상 및 국민 소통 확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권익구제 강화	● 집행 정지 확대 및 현장 조사 강화 ● 부당성 심사 강화를 통한 일부 인용 확대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	● 전문성 제고를 위한 풀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불합리한 법령·제도의 근본적 해결
찾아가는 행정심판	● 지역 순회 행정심판 ● 화상심리 시행
전자 행정심판 활성화 등을 통한 정부 3.0 구현	
원스톱 서비스 인프라 확대	● 허브 시스템 3단계 구축
공공정보 공개 강화	● 정보 공개 인용 사례 분석 전파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	● 재결례 및 모범례 3천 건 공개 (허브 시스템)
행정심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업 확대	
처분청 협력 강화	● 행정심판 빈발 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특별 행정심판 기관 간 협력 강화	● 상호 심판 참관, 간담회 실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력 강화	● 권역별 시·도 행심위 정책 간담회 실시
처분청 전문성 제고	● 분야별 전문 교육 실시
위원회 내부 시너지 제고	● 권익구제 발전연구회 개최
행정심판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안 모색	
행정심판 국제 교류 협력 강화	● 제2회 행정심판 국제 심포지엄 추진
행정심판 30주년 기념 사업	● 행정심판 발전 방안 심포지엄 개최 ● 행정심판 30년사 발간
권리구제 기능 강화	● 정책 연구용역 추진

국가 재정 지키는 파수꾼,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사례 1〉

㈜○○○는 대표 A씨는 정부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 O명을 연구자 명단에 등재해 허위로 인건비를 청구하고, 구입하지 않은 장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1억 540만 원의 연구비용을 편취함

〈사례 2〉

㈜○○는 '유기질 비료 생산 시설 증설 지원 사업'과 관련해 ○○군 청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존에 설치돼 있던 자동 로봇 시설을 새로 설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해, 4억 71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함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권익위로 일원화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각종 보조금의 부정 수급 신고 관련 접수·처리 업무를 권익위로 일원화하는 것을 결정했다. 기존에는 개별 부처의 민원실이나 예산 낭비신고센터, 권익위의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등에서 각각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앞서 2014년 12월 4일 경제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권익위에 설치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비복지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까지 처리하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국고 보조금 예산 규모는 2015년을 기준으로 2,240개 사업에 대해 58.4조 원에 이르는 등 계속 증가하는 실정이며, 이에 비례해 부정 수급의 규모도 점차 급증하는 추세다. 2014년 1월 검·경이 발표한 '국가 보조금 비리 합동 수사' 결과에 따르면 1,700억 원 규모의 보조금 편취·횡령 등의 부정 수급이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드러나지 않는 재정 누수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 증가·수급자 간 형평성 저해 및 재정에 대한 국민 신뢰 상실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왔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를 신고하고 싶어도 정부 내에 전문적

으로 이를 상담하고 신고를 받아 처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전문 시스템이 부재했다.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여러 부처로의 신고 체계 분산과 전담 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환수 실적이 저조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범정부 협업 조직,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출범

국민의 눈과 귀, 발이 되어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행태를 상시 감시할 통합 거점만 생기면서, 이제는 복지 급여·서비스 부정 수급뿐 아니라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개인 및 사업자에게 지급 되는 시설 자금·운영 자금 등의 부정 수급 신고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조직으로서 정부의 주요 복지 정책과 보조금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 부처 및 공공 기관에서 전담 조사 인력을 파견 받아 전문적인 신고 상담·접수, 신고 조사·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 및 비밀 보장, 신분 보호와 함께 신고자에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따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가 재정 관련 부정 수급과 편취, 횡령 등의 사례에 대해, 우리 국민은 누구나 국번 없이 110번만 누르면 신고 상담에서 보호·보상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고 접수는 인터넷·방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용기 있는 신고가 튼튼한 국가 재정을 만드는 초석이 된다. 국민 스스로 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와 함께 보조금 부정 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하길 바란다.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 110으로 신고하세요!”

신고 상담 : 국번 없이 110 홈페이지 : www.aarc.go.kr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팩스 번호 : (02) 2110-0678

우편 접수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방문 상담 : 과천 정부종합청사 2동 2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상담실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부정 수급 신고 앱

한눈에 보는 국민권익 주요 사례

국민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국민권익 지킴이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고자 늘 노력 중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국민권익의 수호자로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권익위에 접수된 행정심판, 고충민원, 부패·공익신고 등의 사례를 통해, 소중한 국민권익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복수 정답 인정

Case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1개 문항의 복수 정답을 인정해, 223명이 추가 합격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제는 ‘동지(冬至)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4지 선택형 객관식 문제였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제9회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제기한 ‘한국문화, 16번 문항’의 복수 정답을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③번 지문인 ‘외양간과 변소 등 온 집안에 등불을 켜놓고 밤샘을 한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②번 지문인 ‘양력 12월 22일로 태양력의 절기에서 비롯된 명절이다’는 정답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동지(冬至)는 양력 12월 22일’이라는 ②번 지문도 옳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경 복무 중 질병 악화됐다면, ‘공상’ 인정

Case

A씨는 2013년 11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8개월 간 복무하다가, 지난해 8월부터 갑자기 통증이 심해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거대세포종’, ‘경추척수증’을 진단 받아 수술을 받고 직권면직 된 데 이어, 전공사상(전투 중·공무 중 사적인 사망 또는 부상) 심사위원회에서 ‘사상(사적인 부상)’ 판정을 받았다.

Solution

권익위는 질병이 의무경찰 복무로 발병했다는 원인 증명이 어렵더라도 증상이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질병의 발병 및 악화 면에서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상이자에 한해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긴장된 상태에서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이 대법원 판례보다 ‘공상’의 인정 범위를 더 좁게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정 전 순직 소방원도 국가유공자!

Case

A씨는 현재 고인이 된 부친이 부산소방서 소속 소방원으로 재직 중이던 1945년 10월, 부산육군창고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가 폭발 사고로 순직했다며,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국가공무원법」 제정(1949년 8월) 전에 사망해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했다.

Solution

중앙행심위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이라도 소방원이 화재 진압을 하다가 순직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당시 제헌 헌법과 (구)국가공무원법은 법 시행 이전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후 한 행정처분은 잘못

Case

A씨의 부친은 1988년 8월, 부천시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했다. 이에 원미구청은 「건축법」 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 사항을 1988년 10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던 2014년 3월, 부천소방서의 특정 소방대상물 전수 점검으로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부친으로부터 소유권을 증여받은 A씨에게 시정 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자, A씨에게 2천 3백여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Solution

권익위는 26년 전 위법 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 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판단, 이를 취소하도록 원미구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정부 민원상담, 이제 110번만 기억하세요!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 등 5개 정부 기관의 민원상담 전화가 5월부터 정부 대표 민원 안내 전화인 110번으로 단일화된다. 권익위의 110콜센터가 더 쉽고 보다 포괄적인 ‘국민 해결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5월부터 행자부·인사처 등 5개 정부 기관 상담 번호 단일화

권익위가 운영 중인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콜센터’)와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국가보훈처·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5개 기관이 ‘110번’ 사용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 2015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전화 민원상담을 시작한다. 부처별로 운영하던 정부 콜센터 민원 전화가 110번으로 통합돼, 이제는 번호 하나로 정부 업무의 모든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각 기관의 기존 대표 번호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이용 편의를 위해 행정 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대표 전화번호를 ‘110번 정부 대표 안내 전화’로 단일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작년 해양수산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 및 권익위의 대표 번호가 110번으로 통일됐고, 올해 행자부 등 5개 기관으로 대상 기관이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41개 부처에서 96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은 민원이 있어도 정부 개별 민원상담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고, 어디로 전화를 해야 할지 알기도 어려웠다. 이처럼 정부 기관별 민원 전화 운영에 따른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권익위는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정부 단일 대표 번호(110)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 110콜센터로 “정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권익위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이하 110 콜센터)’에서는 국민이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110콜센터에서는 상담사가 일반적인 행정 민원은 직접 상담·안내하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주요 민원으로는 ▲지방세(위택스)나 근로장려금 등 세금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행정 민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 교육 정책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다.

110콜센터는 명절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한다. 명절에 특히 많은 문의가 예상되는 고속도로와 국도의 교통 정체 상황과 대중교통 운행 시간, 불법 주차 단속 문의, 지역별 날씨 등 각종 귀성 정보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의 위치 정보, 지역 문화 행사 등 다양한 생활 정보에 대한 상담과 안내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야간 근무 수당 미지급 건 신고 방법 문의 ▲신분증 분실 문의 ▲창업 자금 대출 가능 기관 문의 ▲재산세 납부 방법 문의 ▲소음 단속 문의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담이 진행된다.

110콜센터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전화 상담 외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0트위터(@110callcenter), 페이스북(110call) 및 온라인 채팅·수화 상담(m.110.go.kr) 등을 통해 실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 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수화 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상담 시간 외에도 예약 번호를 남기면 원하는 시간에 상담 예약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110’을 검색해 ‘110콜센터’ 앱을 다운 받으면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Info

국민 곁에 항상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민원이 있으십니까? 정부 정책이 궁금하십니까? 110번이 신속히 안내해 드립니다. 작은 일에서 큰일까지 110번이 도와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을 눌러 주세요!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8시 ~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 국번 없이 110
외국인 상담 :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언어로 상담 가능
해외 상담 : 82-2-6196-9110



악취와의 전쟁, 사전에 점검하고 대처하는 것이 최선!

매년 여름철에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악취 민원. 악취는 불편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생활불편 민원으로,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권익위는 악취 발생 지역과 유형 등을 미리 분석해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저해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악취 민원, 여름철 7, 8월이 최대 고비

권익위가 2013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악취 피해 관련 민원은 총 18,198건이었다. 그 중 여름철 악취 피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7월과 8월로, 이때 민원 제기가 집중했던 이유는 더위를 피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밖에 오폐수로 인한 악취는 장마가 시작되는 6월에 가장 많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악취 피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산업단지 등 제조 시설이 3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축사·농장 등 농축산 시설이 18.0%, 쓰레기·폐기물이 14.1%, 하수 등 오폐수가 14.0%, 음식점 등 주택가 영업장이 8.7%순으로 나타났다.

민원 발생지를 살펴보면,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의 민원이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특히 경

기·인천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등 제조 시설의 악취가 각각 42.4%, 67.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울은 하수도 등 오폐수(관련 민원 32.0%)가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수도권 다음으로는 대전(7.6%), 부산(5.0%)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

인구 10만 명 당 악취 민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세종시가 123.1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 90.7건, 인천 90.4건, 경기도 53건, 충북 35.2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세종시의 경우는 축사 분뇨 등 농축산 시설의 악취가 63.2%를 차지했고, 대전시는 산업단지가 82.3%, 충북은 농축산 시설이 47.5%로 나타나 각각 악취 민원의 진원지가 도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집계되었다.

접수된 악취 민원을 처리 기관별로 살펴보면 악취 방지 집행 기관인 기초 지자체가 90.5%로 가장 많은 악취 민원 건수를 점유했고, 광역 지자체 6.0%, 정책 기관인 환경부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천시 서구가 1,6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수원시 1,036건, 대전시 대덕구 1,029건, 경기도 김포시 62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악취의 원인으로는 인천시 서구, 대전시 대덕구, 경기도 수원시·김포시·시흥시·화성시·안산시 등에서는 산업단지 등 제조 시설로 인한 악취가 주를 이루었고, 경기도 용인·평택시는 축사·농장 등 농축산물 시설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밖에 경기도 고양시는 쓰레기로 인한 악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접수되었다.

한편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민원 감소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미리 제공했다.

“

여름철 악취 피해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7월과 8월로, 이때 민원 제기가 집중했던 이유는 더위를 피해 창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이다.

”





온 가족이 잠드는 시간에 고무 타는 냄새가 심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자정 무렵에 특히 심하다 보니, 요즘처럼 한여름의 열대야에도 창문조차 열 수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비양심적인 해당 업체를 적발해, 개선 조치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 인천시 서구 김 모씨)

산업단지 인근에 살다 보니, 극심한 공업용 악취가 시도 때도 없이 기승을 부려 살 수가 없습니다. 입주인이 8천 명이나 되는데 매일 창틀에 쌓이는 시커먼 먼지이며, 악취 문제까지……. 일상생활이 너무도 힘들니다. 조속히 악취 문제라도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대전시 대덕구 나 모씨)



해마다 여름철만 다가오면 하수 악취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이사를 왔을 때에도 냄새가 좀 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여름이 되니 이 정도로 심해질 줄이야……. 도대체 정부에서는 하수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014년 8월, 서울 마포구 이 모씨)

집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냄새가 심합니다. 처음에는 저녁 9시 전후로 냄새가 나더니,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하루 종일 냄새가 납니다. 찌는 무더위에도 창문조차 열 수 없으니 찌증도 나고, 머리까지 아플 지경입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 문제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지 않나요?

(2014년 8월, 경기도 고양시 김 모씨)



내 집 마련의 기쁨을 안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깐……. 인근 상가 음식점의 굴뚝 배기시설이 아파트 쪽으로 설치되어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배기가스가 아파트 내부로도 들어와 빨래를 해도 냄새가 가시질 않고, 건강상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불편한 기분이 드는데 배기구를 T자로 설치하든지, 싯갓 뚜껑을 설치하든지, 직접적인 배기가스의 피해가 없도록 시정 조치 바랍니다.

(2014년 7월, 경기도 수원시 김 모씨)

집 인근에 축사가 위치해 있어 평소에도 심한 분뇨 냄새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여름철에는 더 심해진 악취로 생활이 어려울 지경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가득이나 불쾌지수도 높는데, 창문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축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2014년 7월, 세종시 김 모씨)



지난 6월부터 창문을 열면, 석유와 같은 휘발성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옆 건물 공사현장에서 나는 것이더군요. 7월 들어서자, 공사가 멈춘 밤에도 창문을 열고 지내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 조치 부탁드립니다!

(2014년 7월, 경기도 의정부시 박 모씨)

ACRC



행복 나눔

- 36 **청렴 토크** 영국의 뇌물방지법, 권익위의 청탁금지법과 함께 청렴한 세상으로
- 40 **일상생활 개념노트** 스마트폰 앱으로 더 스마트해진 일상
- 42 **문화 레시피** 때 이른 무더위 속 문화 순례를 떠나다
- 44 **똑똑! 생활법률** 믿고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 46 **꼭 알아두세요!**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 이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으로~
- 48 **ACRC News**
- 50 **독자 옴부즈만**

영국의 뇌물방지법,

권익위의 청탁금지법과 함께 청렴한 세상으로



▶ 이성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찰스헤이 주한영국대사 접견

권익위는 2015년 4월, 영국 정부와 양국 간의 반부패 정책들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 1년 간 영국 정부의 지원(영국 외무부 변영기금)을 받아 영국의 뇌물 규제, 정부 예산 부정청구 제재,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지난 12월 9일에는 '세계 반부패의 날'을 기념해 양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1차 한-영 공동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올 3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제2차 반부패 세미나를 개최하며, 선진적인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권익위는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 BS 10500(기업 반부패 시스템 표준)과 같은 우수 반부패 제도를 적극 도입해,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청렴 의식을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신임 주한 영국대사인 찰스 헤이(Charles Hay)를 만나 그동안 펼쳐온 양국 간의 반부패 협력 성과와 영국의 반부패 정책 및 문화, 최근 우리 정부가 제정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주한 영국대사로 대한민국에 머무시면서 드신 소감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첫 인상을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한 영국대사로 부임한 지난 4개월 동안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한국 국민들께서도 저를 굉장히 환영해주셨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오랜 역사, 특히 영국 정부의 한국전쟁 참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경제 · 통상 관계, 과학 분야 공동 연구, 국제 규범 체계 발전 등 전 부문에 걸쳐 양국 관계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부패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패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어떠한 국가도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부패 척결에 '성공 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수년 간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된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부패와의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반부패 및 부정 청탁 등과 관련해 어떠한 정책, 제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국 정부는 최근 부패 척결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훌륭한 사회 구조와 법 체계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뇌물 범죄에 대한 중합 체계를 제공하는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세계적인 부패 방지법입니다. 영국은 국가범죄수사국(National Crime Agency, NCA)을 설립해 뇌물 및 부패와 같은 심각한 조직범죄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조치를 통해, 영국을 거쳐 유출되거나 세탁된 자금을 회수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의 선례를 바탕으로, 영국의 반부패 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14년 12월, 처음으로 추진된 영국의 반부패 계획(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부문에 걸쳐 부패 위협을 해결하고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동 방식을 규명함)을 통해 영국 전역의 반부패 노력을 총 망라해 체계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G20의 노력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인의 실소유자에 관한 조치 이행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까지 '일반 대중이 접근 가능한 중앙 등록 시스템 설치'를 골자로 한 법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등록 시스템의 목적은 법인의 실소유자를 명확히 하고, 탈세 · 자금 세탁 · 부패를 더욱 용이하게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영국의 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2010), BS 10500(기업 반부패 시스템 표준)과 같은 우수 반부패 제도를 적극 도입해,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을 개선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청렴 의식을 일깨우려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제정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영국의 ‘뇌물방지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부패 척결에 있어 영국의 역할을 담은 강력한 법이며, 이는 경쟁력을 갖춘 동시에 공정한 관행 구축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뇌물방지법은 효과적인 부패 척결을 위한 분명하고 종합적인 프레임 워크를 제공한 최초의 법입니다.

영국의 뇌물방지법은 다음과 같은 부패의 4가지 측면에 집중합니다.

- I. 뇌물 공여 (금전 상으로 혹은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약속함)
- II. 뇌물 수수 (금전 상으로 혹은 기타 이익 수수에 동의함)
- III.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 IV. 기업을 위한 뇌물 공여

본 법은 뇌물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며, 기업이 뇌물 수수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도 범죄로 규정합니다. 즉 해당 기업의 계열사 직원 이 해당 기업의 이익을 위해 뇌물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업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시행령 마련 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기업에서 뇌물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절차를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뇌물 방지법에 따라 징역형은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벌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영국인의 기소도 가능하며, 급행료 수수 역시 제한됩니다. 더욱이 뇌물 범죄를 목인한 고위 관리직도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 법이 영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외국 기업과 해외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영국 기업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청탁금지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포괄적인 법 체계가 필요합니다. 한편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시행령 마련 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은 모든 법에 있어 해당 법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항상 생각해야만 합니다. 법의 본래 취지, 즉 청탁금지법의 경우에는 부패 척결이 달성될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결과를 규명하고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법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견주어 볼 때, 청탁금지법 시행에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혹은 실효성 면에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려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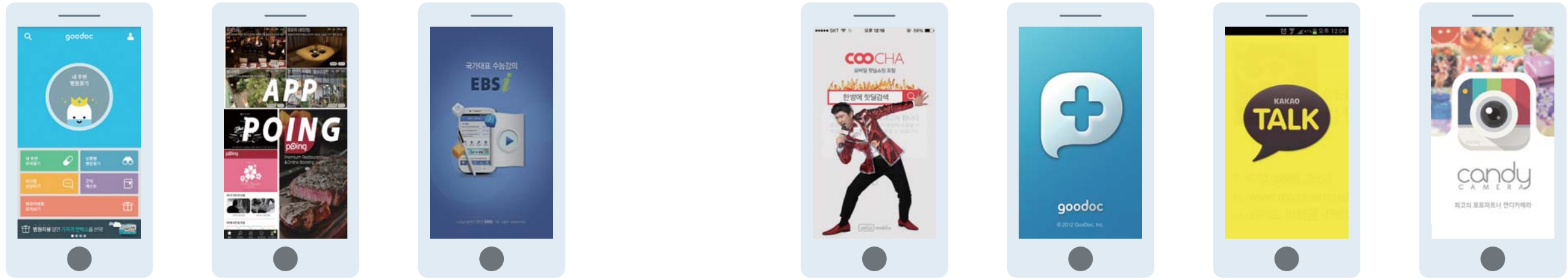
청탁금지법의 실효성을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시점입니다. 뇌물 사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검찰 측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며, 사례 연구가 이뤄지기 전까지 본 법이 어떻게 활용될 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뇌물방지법과 한국의 청탁금지법은 모두 고위 관리직의 책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행령에서 기업 및 고위 관리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위 관리직은 부패를 기업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로 인식함과 동시에 내부 고발이 장려되는 올바른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권익위와 함께 반부패 협력 사업을 긴밀하게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취지로 시작된 일인지, 해당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권익위와 함께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반부패 협력 사업을 통해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공식화하고, 양국의 주요 반부패 법과 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본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협력 사업에 대한 언론 보도 역시 우리가 초기에 희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영국 정부를 대표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익위와 함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가 권익위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영국 정부는 종합적 반부패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권익위 및 업계와 함께 노력 중입니다. 특히 각 기업의 영국 뇌물방지법 준수를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뇌물방지 경영 시스템인 ‘BS 10500’과 관련해 영국표준협회(BSI)와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BS10500을 기본 골자로 삼아, 부패 방지 관리 시스템의 새로운 국제 기준인 ISO 37001의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BSI는 현재 협력 기업 선정 과정에 있으며, 영국 정부는 올해 안에 공청회를 통해 동 사업의 성과를 소개할 수 있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인강 듣고, 카톡 보내고...

스마트폰 앱으로 더 스마트해진 일상

한국이 모바일 사용량으로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인터넷 인구는 4,531만 4천여 명으로,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무려 90.6%가 인터넷 유저인 셈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이제 모두가 스마트폰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걸어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것은 어느덧 남녀노소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채널이 됐다.

한국 인터넷 인구 90.6%, 모바일 사용량 세계 1위

5월 14일 모바일앱 분석 기업 앱애니가 발간한 '앱 고객 확보 인사이트 : 2015년 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바일 데이터 사용량이 해외 주요 앱 시장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고 한다. 올해 1분기 한국 모바일 사용자들의 데이터 사용량 지수는 125로, 비교 국가인 미국(100), 일본(90), 영국(80), 독일(70)을 앞질렀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단일 앱으로는 카카오톡에서, 가장 많은 분야별로는 유튜브를 선두로 미디어와 동영상 관련 앱에서 데이터의 소비량이 많았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앱인 '라인'이 일본 아이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인기 1위 앱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것도 눈길을 끈다.

국내에서 이용이 가장 활발한 범주는 커뮤니케이션과 소셜로, 전체 모바일 활동의 60%를 차지했다.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쓰는 커뮤니케이션 및 소셜 관련 앱은 1위 '카카오톡'에 이어 '캐시슬라이드', '페이스북' 순이었다. 앱 체류 시간은 카카오톡이 가장 길었고, 페이스북이 2위, 다음이 3위였다. 커뮤니케이션 관련 앱이 모바일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향은 다른 4개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국과 일본, 독일은 커뮤니케이션을 1:1이나 1:소수로 하는 메신저 앱을, 미국과 영국은 1:다수 방식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앱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세는 역시 메신저 앱!

시시각각 일상에 침투하는 모바일 혁명에 우리의 삶도 어느새 보폭을 맞추고 있다. 스마트폰을 더욱 스마트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수십만 개에 달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앱만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도 있고, 버스나 지하철의 실시간

이동경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영화나 연극 등의 공연도 바로 예매할 수 있다. 그뿐만아. 각 언론사의 최신 뉴스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고, 영화나 음악, 사진을 감상하고 저장/편집할 수 있으며,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나 약국, 병원 등을 찾아 주는 증강현실 앱도 어느덧 스마트폰 필수 앱으로 인식되고 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공부도 일상이 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자투리 시간 활용에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앱은 'EBS 수능 강의'다. 배속 조절 기능, 북마크 기능 등 활용도가 뛰어난 앱 강의를 미리 내려 받아 학교 자습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예습 및 복습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단어장을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영단어장은 직장인 사이에서 큰 인기다.

5월 27일(현지 시간 기준) 미국의 벤처투자 기관 KPCB의 파트너인 매리 미커가 발표한 '2015년 인터넷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일 평균 구동 횟수 55회를 기록한 한국의 카카오톡이 전 세계 애플리케이션 중 사용률 면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카카오톡을 포함한 메신저 앱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넘어 이미 게임, 쇼핑, 결제, 미디어 등 콘텐츠 및 생활 플랫폼으로 확장 중이다. 글로벌 경제 잡지 포브스는 지난 1월 7일(현지 시간 기준) 한 해 동안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인 애플리케이션의 카테고리 순위를 발표했다. 모바일 앱 시장을 견인한 것은 쇼핑 앱으로,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174%씩 증가세를 보였다. 메모, 계산기와 같은 서비스를 말하는 유틸리티와 생산성 앱은 121%씩 성장하며 성장률에서 2위를, 메신저와 SNS 앱은 103% 성장하며 3위를 기록했다. 모든 범주의 앱을 합칠 경우 스마트폰 앱 시장은 1년 만에 무려 7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브스는 모바일 기기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앱으로 쇼핑을 하거나 건강을 측정하는 등 앱 기반의 운영 체제가 우리 삶의 일부분을 차지하며, 당분간 앱 시장의 성장률은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 전망했다.

Hot Trend 알아보기!

지난 한 해 동안 화제가 된 애플리케이션은?

게임 분야: 클래식 오브 클랜

마을을 건설하고 유닛을 훈련해 상대를 물리치는 전략 전투 게임. 전 세계 135개국 앱 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한 인기 게임으로, 현재 1억 명 이상이 다운로드받았다.

쇼핑 분야: 쿠팡

누적 다운로드 500만 건 이상을 기록한 모바일 핫딜 쇼핑 포털. 국내 소셜 커머스, 홈쇼핑 등 모든 상품 정보를 모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다.

맛집 분야: 포잉

외식 전문가들이 엄선한 서울 최고 레스토랑 2,000곳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앱. 레스토랑 소개 및 리뷰는 물론, 예약도 가능하다.

카메라 분야: 캔디 카메라

후보정이 필요 없는 실시간 필터 & 무음 카메라 앱. 감성적이고 개성 있는 60가지 이상의 실시간 필터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의료 분야: 굿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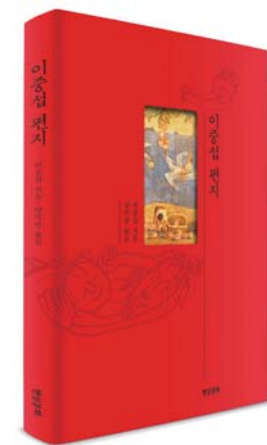
휴일 진료, 야간 진료, 응급실 등 실시간으로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앱으로, 150만 건 이상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한 '상비 앱'이 됐다. 전국 모든 병원 정보를 제공하며, 내 주변 병원 찾기, 전국 병원 이벤트 보기, 1:1 상담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한다.

때 속 이 른 무 더 위 문 화 순 례 를 떠 나 다

달콤했던 봄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성급한 더위가 옷소매를 짧게 만드는 요즘. 일찍 찾아온 더위로 무기력해졌다면 당장 문화 순례를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책, 뮤지컬, 전시, 축제까지 구미 당기는 대로 행사를 즐기다 보면 더위도 잠시 잊힐 것이다.

BOOK 이중섭 편지

이국을 건넌 애뜻한 사랑의 안부
편지 쓰는 일이 특별한 행사가 되어버린 시대다. 그러나 기대치 않은 안부 편지는 누구에게나 두근거리는 일. 오랜만에 받아본 편지 한 통처럼 독자들에게 설렘으로 다가올 책, 〈이중섭의 편지〉를 소개한다.
이 책은 천재 화가 이중섭이 가난과 전쟁 때문에 떨어져 지내야 했던 가족에게 보낸 편지를 담았다. 이중섭은 1952년 한국전쟁 당시, 일본으로 아내와 두 아들을 떠나보낸 후 애뜻한 마음을 곡 곡 눌러 담아 편지에 보냈다. 그가 머물렀던 장소에 따라 '부산, 통영, 서울, 대구' 이렇게 네 장으로 편지를 나눠 수록해 이중섭의 상황과 감정을 따라가며 읽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의 전부인 아내와 아이들에게 쓴 가슴 절절한 편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빼곡하다. 더욱이 이중섭이 그린 그림엽서, 드로잉, 유화 등 발표 연대에 따라 78점의 작품이 수록돼 있어 그의 사랑과 삶 그리고 예술세계까지 잘 들여다 볼 수 있다.



Information
저자: 이중섭, 양억관 역
출판: 현실문화 출판사

MUSICAL 팬텀



비극적인 운명, 강렬한 무대가 주는 감동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뮤지컬 '팬텀'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빠른 전개와 스릴 넘치는 음악, 탄탄한 스토리로 찬사를 받고 있는 이 뮤지컬은 가스통 르루의 추리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극작가 아서 코핏과 작곡가 모리 예스톤이 만든 뮤지컬로, 작품이 탄생한지 31년 만에 이뤄진 국내 초연이라 더욱 특별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배우 류정환과 가수 박호신, 파페라 가수 카이가 팬텀을 연기하며, 크리스틴 다에 역에는 성악가 임선혜, 뮤지컬 배우 임혜영, 성악가 김순영이 맡았다. 국내 최정상급의 배우들이 열연하기에 더 기대를 모으는 이 작품은 흥찬한 얼굴을 가면으로 가린 채 살아가는 팬텀(예릭)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크리스틴이 주인공이다. 팬텀의 비밀스런 유년기를 집중 조명하며, 그의 비극적인 운명을 잘 그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극중에서 팬텀은 여러 종류의 가면을 바꿔 착용하며, 감정 상태를 더욱 생생하게 표현한다. 클래식함과 세련된 현대미를 겸비한 작품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Information
기간: 2015년 4월 28일 ~ 2015년 7월 26일
장소: 충무아트홀 대극장

EXHIBITION 로봇 에세이



ROBOT IN ART
영화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로봇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존재이지만, 일상에서 대면하는 일이 많지 않아 낯설기도 하다. 익숙한 듯 낯선 로봇을 예술 안으로 끌고 들어온 전시, 〈로봇 에세이〉전을 소개한다. 이 전시회에는 패트릭 트레셋, 레베카 혼, 비르길 비트리히, 피터 윌리엄 홀든, 김상진, 노재운 등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8점이 전시된다. 전시에 참여한 작가들은 기계를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비르길 비트리히의 6분짜리 영상 작업은 전시장 입구에 설치되어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이한다. 패트릭 트레셋은 창작을 하는 로봇 '폴'이라는 이름의 다섯 로봇(2012)'을 설치해 관람객이 의자에 앉으면 로봇 폴이 관람객의 얼굴을 그리게끔 한다. 렌즈를 통해 표현된 드로잉들이 전시장 벽면을 채우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피터 윌리엄 홀든은 인공 팔과 인공 다리로 구성된 기계장치가 사운드와 함께 움직이는 퍼포먼스를 선보일 '아라베스크(2007)'를 전시해 관람객의 눈길을 끈다. 색다른 볼거리가 가득한 〈로봇 에세이〉전은 예술 안에서 기계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할 것이다.

Information
기간: 2015년 4월 28일 ~ 2015년 7월 19일
장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FESTIVAL 부산 록 페스티벌

소리 질러~ 최장수 록 페스티벌이 돌아온다!
여름을 즐기게 보내는 방법으로는 이열치열이 있다. 땀별 아래 록 음악을 들으며 열정을 불태운다면, 이것이야말로 무더운 여름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록 스피릿을 불태울 축제, 부산 록 페스티벌을 소개한다.
부산 록 페스티벌은 2000년부터 열린 역사 깊은 축제다. 원래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이었으나, 올해는 국제라는 명칭을 빼고 돌아왔다. 공연료가 무료라는 것이 이 축제의 가장 큰 즐거움. 현재 1차로 공개된 라인업은 FINCH, 갤럭시 익스프레스, 에브리싱글데이, 뷰렛, 옐로우문스터즈, 고고스타, 앤디스테이지 등이다. 사전 예약이 필요 없고, 일부 라인업 확장은 다른 공연에 비해 늦게 이뤄진다고 하니 참고하자. 라인업 공개만으로도 벌써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부산 록 페스티벌. 땀별 아래, 록 스피릿에 불을 지필 환상적인 공연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Information
기간: 2015년 8월 7일 ~ 2015년 8월 9일
장소: 부산 사상구 삼락 생태 공원

글:
전채련 기자

믿고 인터넷 쇼핑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건을 수령했을 때,
인터넷 게시 글과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인터넷 게시 글과 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에 대한 문의〉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보고 오토바이를 구입했는데, 연식 및 적산 거리 등을 확인한 결과 게시 글의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인 본인도 그렇게 알고 샀다며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더니, 문자 · 전화 · 카톡 등 어떠한 수단으로든 연락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터넷 캡처 본과 함께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글 속 오토바이의 상태와 실제 오토바이의 상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귀하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해, 대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에 나타난 대로 관련 서류와 인터넷 캡처 본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매도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기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실 필요 없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경찰을 통해 파악한 다음,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 게시된 오토바이의 상태와 실제 상태가 달라 해당 오토바이의 매매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니 대금을 ○○월 ○○일까지 환불해주시기 바랍니다'란 내용으로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등기 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통보를 한 후에도 상대방이 약정된 기일까지 대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취소)로 인한 대금 반환 청구,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호에 이어 <똑똑! 생활법률>에서는 본의 아니게 겪게 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법률적인 면에서 살펴 보며, 해결 방법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인터넷 상거래와 관련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실제 상품 내용이 다른 경우', '온라인으로 결제 완료한 상품의 미 발송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함께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정보를 전하며,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온라인으로 결제한 물건이 배송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되나요?

〈인터넷으로 주문 결제한 상품의 미 발송에 대한 문의〉

인터넷으로 책을 구매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물건이 오질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을 하면 상품 준비 중이라 하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면 출판사의 문제라며 핑계를 댑니다. 이러한 경우도 사기죄라고 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실제로 책을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본 사건의 경우처럼 인터넷 상거래를 운영하면서도, 실제로는 해당 책이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책을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거래를 성사시켜 매수금을 취득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책을 거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사정에 기해 책을 거래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단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면, 수사 기관의 수사에 의해 결정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자께서 지불한 책값의 원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자가 한 달 넘게 기다린 것에 대한 손해는 '특별손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채무자가 해당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판매자 측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지연된 사실 관계 및 이러한 사실 관계 아래 형법 상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신고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전하시고, 해당 책 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하리라 여겨집니다.

소득이 늘어나도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 된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 게 모든 급여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가구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날 정도였다. 이에 공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을 맞이했다.

새롭게 바뀌는 맞춤형 급여 체계는 급여별 선정 기준을 생계·의료·주거·교육으로 다층화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소득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중위소득(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을 통한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 지역별 실제 주거비 부담을 반영한 주거 급여 등 급여 보장 수준도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 과정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현장에서 2015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4백 22만 원으로 심의 및 의결하고, 급여별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 역시 최초로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기존 중위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 이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으로

을 7월부터 확 바뀐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첫 선을 보인다. 지난 2000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그간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기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곳곳에 복지 사각지대가 드러나면서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개편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기초수급자들이 국가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인 만큼,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 급여는 28%, 의료 급여는 40%, 주거 급여는 43%, 교육 급여는 5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 체계의 지원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해 환산한 후 소득 인정액이 1백 67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소득 인정액 2백 11만 원 이하의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역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 더 많은 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맞춤형 급여 체계를 통해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을 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 강화된다.

이밖에 의료 급여의 경우에는 질병·부상·출산 등 여러 의료 서비스를 본인 부담률을 낮춰 이용할 수 있다.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쳐주며, 교육 급여는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를 지원하게 된다.

맞춤형 급여 체계로 더 많은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지원

새로운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골자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단일 기준으로 급여를 일괄 지급하던 것을 실질적인 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맞춰 나가자는 것이다. 이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아래, 급여별 선정 기준을 달리해 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정부가 책임지고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통해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소득이 올라가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급여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필요한 보장을 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 개편·시행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전산 시스템 개발, 지자체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해왔다. 또한 3개 소관 부처 간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강화해나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과제인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 명에서 최대 210만 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 급여도 42만 3천 원에서 47만 7천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한 개편인 만큼, 수급자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최고 맞춤형 제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기업 대상 ‘건전한 대관문화 조성’ 토론회 개최



권익위는 지난 6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기업의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건전한 대관(對官)문화 조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비롯한 경제·직능 단체 및 19개 공기업은 「청탁금지법」과 바람직한 대관문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19개 공기업은 ▲‘기업윤리의 날(6.2.)’ 지정·운영, ▲투명한 기업문화 확립, ▲윤리 규범 마련·보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채택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러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문’을 계기로 여타 국내 기업들과도 함께 6월 2일을 ‘기업윤리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이 포함된 주(週)를 ‘기업윤리 주간’으로 운영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 장흥군 덕제 교차로 안전대책 마련 현장조정회의



권익위는 수차례의 실무 협의와 현장조사를 거쳐 5월 12일 장흥군청에서 국도23호선 덕제 교차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덕제·평장마을 주민 1,092명의 집단민원을 주민들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장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23호선 공사 구간 중 평면 교차로로 설계된 덕제 교차로에 대해, 교통 전문 기관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장흥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결과에 따른 행정 절차 이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UN·스페인과 행정심판 관련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



중앙행정심위는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6일간 UN 산하 행정재판 기관, 스페인정부 행정심판 유관 기관들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제도를 소개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원거리 지역에 대한 방문 연구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UN 산하 행정재판소들의 경우 한국 정부 고위 인사의 방문은 처음으로 기관 간 교류·협력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UN대표부가 위치한住제네바 한국대사관의 법무담당 참사관은 “UN 행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이 임명되는 만큼, 세계와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제사회 속 우리나라의 위상을 감안했을 때 인적 교류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제 컨퍼런스 통해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방안 논의



권익위는 5월 19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UNGC 지도자 정상회의 2015’에서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내외 정부, 기업, 유엔, 학계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UNGC 지도자 정상회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기업의 인식 제고와 확산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비롯해, 수실로 범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녹색성장기구 의장,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UN사무총장 MDGs(새천년개발목표) 특별고문 등이 주요 연사로 참여했다.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콘서트’



5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강당에서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청렴 콘서트는 권익위가 개발한 공연, 토크쇼, 강의 등이 융합된 청렴 교육 프로그램으로, 권익위의 청렴연수원에서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작년에는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에서 90여 차례에 걸쳐 무대에 오르는 등 큰 호평을 받았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 행위’ 특별 신고 기간 운영



권익위는 공공 부문에서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패 행위 척결을 위해 5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공공 부문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 행위 가운데 비중이 높은 4개 분야로 인허가·계약 권한 남용, 감독·단속 권한 남용, 예산·회계 권한 남용, 인사 권한 남용으로 유발되는 부패 행위다. 신고는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정부세종청사),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또는 청렴 신문고(www.1398acrc.go.kr),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부패·공익 신고 모바일 앱(안드로이드용, 아이폰용)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에서나 부패 신고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독자 퀴즈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국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업호감 지수는 100점 만점에 44.7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업에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윤리경영 미흡(57%)'이 가장 많았다. 이에 기업의 윤리경영을 투명하게 끌어올리고 청렴 문화 달성을 이루고자, 권익위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시킨 법률은 무엇일까?

Hint
〈국민권익〉 0506월호,
‘Special Theme 1-1’ 칼럼이 실린 08~09p 참고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지난 호 정답
양육비이행관리원

—
지난 호 당첨자
문종희 (경기도 남양주시),
박숙희 (강원도 원주시),
이계호 (경남 창원시),
구정목 (경기도 양평군),
김기락 (강원도 원주시)



〈국민권익〉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권익위를 잘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 등 여러분의 의견을 적어 보내주세요. 의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독자의 한마디

문종희 경기도 남양주시 ‘청탁금지법’ 등과 같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 사안을 공익 캠페인으로 제작해, SNS로 널리 보급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치는 물론, 〈국민권익〉 매거진의 가치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위해 애써주세요!	박숙희 강원도 원주시 매스컴의 위력이 역시 최고라고 생각해서, 〈국민권익〉 매거진에 실린 기사를 극화해 공익광고로 제작한 후 TV를 통해 송출하면, 아마 어린 아이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를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계호 경남 창원시 〈똑똑! 생활법률〉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법률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어, 저를 비롯한 소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사고 관련 판례와 같은 내용을 꼭 실어주세요~ 항상 좋은 내용에 감사드립니다!	구정목 경기도 양평군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국민신문고’를 여러 공공 기관과 사회단체에 설치해주면, 국민권의 신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 매거진도 ‘국민신문고’와 함께 배포해 주시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권익〉 매거진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락 강원도 원주시 국민권익위원회 혹은 〈국민권익〉 매거진을 위한 슬로건 공모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국민권익〉 매거진도 잘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새로운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도 공모전을 실시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	--	---	---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新GO!

튼튼한 국가재정의 새로운 시작,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신고상담 국번 없이 ☎ 110
- 팩 스 02-2110-0678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 방문·우편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